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고령층의 재정 상태 분석

- 특수직역연금 수급여부와 공적연금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비교 -

2019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송 혜 경

# 고령층의 재정 상태 분석

- 특수직역연금 수급여부와 공적연금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비교 -

지도교수 김 상 헌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3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송 혜 경

송혜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6 월

위 원 장 박 정 훈 (인)

부위원장 김 봉 환 (인)

위 원 김 상 헌 (인)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층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있어서 특수직역연금수급자(1,151명)와 비수급자(26,385명), 공적연금수급자(7,972명)와 비수급자(19,564명)로 집단을 나누었다.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소비, 자산 수준의 차이를 기술통계분석,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고, 연금 수급 여부가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또한,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에 있어서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성과 추이를 확인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2008년)에서 6차(2016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와 재정 상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는 총소득, 총소비,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항목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는 근로소득이 추가되었다. 둘째,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소득(+)과 근로소득(-)이었다. 셋째,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에 있어서 자산의 불평등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금이 있을 경우 저축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자산소득과 자산수준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관련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자산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고령층, 재정 상태, 특수직역연금, 공적연금, 불평등  
학 번 : 2017-27118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3
제 1 절 이론적 논의 .....	3
1. 가계 재정 관련 이론 .....	3
2. 공적소득보장과 공적연금의 특성 .....	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9
1. 가계 재정과 공적연금 관련 선행연구 .....	9
제 3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16
제 3 장 연구의 설계 .....	17
제 1 절 연구문제 및 변수의 설정 .....	17
1. 연구문제 및 가설 .....	17
2. 변수의 설정 .....	19
3. 연구의 분석틀 .....	24
제 2 절 분석모형의 구성 .....	25
1. 분석자료 .....	25
2. 분석대상 .....	27
3. 분석방법 .....	27
4. 분석모형 .....	29
제 4 장 분석결과 .....	31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	31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	31
2. 재정 상태 비교 .....	36

제 2 절 다중회귀 분석 .....	42
1. 특수직역연금수급자 재정 상태의 영향요인 .....	42
2. 공적연금수급자 재정 상태의 영향요인 .....	53
제 3 절 불평등도 분석 .....	64
1. 재정 상태 불평등도 분석 .....	64
제 5 장 결론 .....	73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	73
참고문헌 .....	76
Abstract .....	79

## 표 목 차

[표-1]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특성 .....	6
[표-2] 연구가설 .....	18
[표-3] 변수의 설정 .....	19
[표-4] 분석모형 .....	30
[표-5]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표-6]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5
[표-7]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 .....	37
[표-8]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 .....	41
[표-9]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44
[표-10]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총소득 ·	45
[표-11]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근로소득	46
[표-12]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산소득	47
[표-13]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총소비 ·	48
[표-14]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총자산 ·	49
[표-15]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동산자산	50
[표-16]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금융자산	51
[표-17]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총부채 ·	52
[표-18]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55
[표-19]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총소득 .....	56
[표-20]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근로소득 .....	57
[표-21]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산소득 .....	58
[표-22]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총소비 .....	59
[표-23]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총자산 .....	60
[표-24]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동산자산 ·	61



[표-25]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금융자산 .....	62
[표-26]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총부채 .....	63
[표-27] 소득 항목 지니계수 .....	65
[표-28] 소비 항목 지니계수 .....	67
[표-29] 자산 항목 지니계수 .....	70

##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24
[그림 2] 소득항목 지니계수 추이 .....	66
[그림 3] 소비항목 지니계수 추이 .....	68
[그림 4] 자산항목 지니계수 추이 .....	71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18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4.3%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8).

그런데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노인빈곤율이 급격히 낮아진 바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5.7%로 OECD국가들 평균의 3배에 달한다(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8).

과거에는 노인들이 주로 사적 부양에 의존해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사적 부양 의식은 점차 약화되어 왔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61.8%는 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구주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국민연금 57%, 기타 공적연금 9.4%)을 주된 노후 준비방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55세에서 79세까지 고령자 중 연금수령자는 45.6%로 고령자의 과반수에 못 미치며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57만원에 불과하다(통계청, 2018).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현재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적은 연금액을 받는 사람이 많다. 이런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문제와 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령층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주로 노인가구주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공적연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공적연금이 소득과 지출,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공적연금을 통한 빈곤완화와 빈곤율, 빈곤제거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마저도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수급 대상자에 대한 분석의 시계열이 짧다. 최근 들어 연금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적연금 수급자 간 삶의 만족도나 공적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층의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이 공적연금이기에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진단 및 평가가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공적연금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포괄하고 있고,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는 도입 시기 뿐만 아니라 월평균 수급액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적연금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으로 나누어 고령층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령층 전체 집단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집단 특성에 따른 정책을 구현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재정 상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을 비교하고자 한다.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른 재정 상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특수직역연금 수급여부와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재정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재정 수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소득, 소비, 자산의 불평등도와 추이를 파악하여 고령층의 노후 준비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제 1 절 이론적 논의

#### 1. 가계 재정 관련 이론

고령층의 가계 재정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 저축이 이루어지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현재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케인즈(Keynes)의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hypothesis)을 비판하며 등장한 모디글리아니(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과 프리드만(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 있다.

##### 1)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

모디글리아니(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wealth)에도 의존한다. 소비가 전 생애를 통해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취업해 있는 동안 저축하여 부를 축적하고 은퇴 후에는 축적된 부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모형의 예측과 달리 노년기에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예비적 저축이나 유산 동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 2)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프리드만(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은 소득이 일정한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 생애주기가설과는 달리 현재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은 노년기의 항상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비수급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금현섭·백승주, 2014:169), 소비를 그만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 2. 공적소득보장과 공적연금의 특성

소득보장이란 질병, 노령,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단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또는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그러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국가에 의한 공적소득보장과 자녀 등에 의한 사적소득보장으로 나뉜다. 공적소득보장은 공적연금제도(pension scheme)와 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scheme), 노령수당제도(the aged allowance scheme)의 형태로 존재한다(이종성, 2018:4).

이 중 공적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말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통칭하여 특수직역연금이라 한다.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역사가 길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975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1982년에 각각 도입되었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서야 도입되었다.

연금 간 비교는 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이루어져 왔다. 공

적연금의 급여산정기준, 급여산식, 수급요건, 보험료율 등 주요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특성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급여산정기준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A+B/2)}
급여산식	재직연수×평균 기준소득월액× 1.7% (‘35년까지 단계적 인하)	재직연수×평균 기준소득월액× 1.9%	{(1.2(A+B)0.05n/12)} (‘28년까지 단계적 인하)
소득대체율	평균기준소득월액의 56.1% (33년 가입 기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 (33년 가입 기준)	표준소득월액의 40% (40년 가입 기준, ‘28년까지 40%)
수급요건	10년 이상 가입	19년 6개월 이상 가입	10년 이상 가입
연금지급 개시연령	65세 (‘33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퇴직 시	65세 (‘33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유족연금	60%	60%	60%(20년 이상) 50%(10년~20년 미만) 40%(10년 미만)
기여금부담률	기준소득월액의 18% (‘20년까지 단계적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14%	기준소득월액의 9%
주: n=가입개월 수 자료: 장현주(2019:308) 수정			

[표-1]에서 급여산정기준을 보면, 특수직역연금은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소득대체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하였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6.1%로 조정한 반면, 군인연금은 62.7%로 유지하고 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 반면, 군인연금은 퇴직 시점으로 규정하였다. 기여금 부담률(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공무원연금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8%, 군인연금은 14%로서 특수직역연금의 기여금 부담률이 높다. 유족연금의 경우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60%로 지급되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로 차등 지급된다(장현주, 2019:307).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상이하게 설계된 이유는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에 의해 1988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이보다 앞선 1960년에 도입되어 공무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 이외에 국가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내지는 유인 기제라는 인사정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태일·박규성, 2014:177).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권혁주·곽효경, 2006:193-194).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제도의 기저에 있는 철학이 다르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면,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이외에 인사정책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재직 중 보수에 대한 보상으로써 공무원연금의 높은 보수 수준이 정당화될 수 있다.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퇴직금(수당)에 대한 보상으로써 공무원의 높은 연금 급여가 정당화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급여만을 갖고 공무원연금이 특혜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김태일·박규성, 2014:177).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특수직역연금은 재정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7년 기준 군인연금에 1조 5,800억 원, 공무원연금에 2조 2,800억 원의 적자가 조세로 보전되었다. 사학연금도 곧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1995년 가입자 기준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 비율)가 1.5배에서 2배 정도 많다.

국민연금은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하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이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면서 가입 예외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연금의 성숙도가 낮다. 특수직역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최소 13년에서 최대 28년 늦게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 복지 국가들이 1910년대에서 1930년대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것과 비교하면 성숙도가 아직 낮은 편이다(장현주, 2019:309).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소득은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또한 공적연금 수급자의 소비지출은 항상소득인 공적연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소비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장현주, 2019:310).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 가계 재정과 공적 연금 관련 선행연구

#### 1) 재정 상태 측정

가계의 재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는 소득이다. 소득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비는 현재소득보다는 항상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자산이나 부채 등은 소득과 소비에 비해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재정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볼 수 있다(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3). 뿐만 아니라 고령층 가계는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산은 은퇴기에 있어 중요한 재정 자원이다. 한편 부채는 효용의 증가나 자산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되나 생애주기 동안 자산과 부채 간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상태를 측정할 때 부채는 자산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배미경, 2006:122).

#### 2) 불평등도 측정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로렌즈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사용한다. 지난 수십 년간 가계 재정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를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해 왔다. 로렌즈곡선은 분위별 누적 가계백분율과 누적 소득백분율 간의 함수로 불평등도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기울기가 1인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이고, 현실의 소득 분포가 완전 평등에서 멀어질수록 대각선에서 떨어진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대각선과 로렌즈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즈 곡선 하방의 면적을 B 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A/(A+B)$ 라는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완전 평등하다면 A의 값이 0 이므로 0이고, 완전 불평등한 상태라면 B의 값이 0이기에 1이 될 것이다.

$$\text{지니계수 } G = \frac{A}{A+B}$$

$$\text{완전 평등} = 0, G = \frac{0}{0+B}$$

$$\text{완전 불평등} = 1, G = \frac{A}{A+0}$$

비숍(Bishop) 등(1991)은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하였으며, 왕(Wang)(1995)은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고령층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불평등도 분석에서 소비지출이 보다 평등하게 분포되어 지출을 통한 고령층 가계의 경제적 지위추정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라드너(Radner)(1987) 역시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로 고령층 가계의 소득이 비고령층 가계의 소득보다 더 많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다(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4).

### 3) 공적 연금 관련 연구

#### 가. 공적연금과 소득

김경아(2008)는 통계청의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분석 결과, 1996년과 비교하여 2006년 노년층 가구의 소득에서 공적연금 및 공적이전의 비중과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비교 대상 자료가 서로 상이한 측면이 있다.

김수완·조유미(2006)는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공적연금 수급 비율은 낮으나 일단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가구에서도 근로 및 재산 소득에 의한 빈곤제거효과가 가장 높긴 하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에 의한 빈곤제거효과도 높음을 보이고 있다.

손병돈(2009)은 1998년에서 2005년까지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2차(1999년), 5차(2002년), 7차(2004년), 9차(200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불평등도의 측정은 지니(Gini)계수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이 노인소득에 가장 크게 기여하나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소득이 노후 불평등을 확대하는 이유로 저소득 노인 상당수가 공적 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현섭·백승주(2014)는 공적연금이 소득안정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7년 간(2005년~2012년)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적연금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가구소득안정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지니(Gini)계수를 활용한 특징이 있다.

김태일(2007)은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년도(2003년) 원자료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2001년)를 이용하여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수급자의 총소득은 비수급자에 비해 2.5배 이상이었고, 이는 대부분 공적연금소득 차이 때문이었다. 반면, 비연금소득

이나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비수급자가 더 많았다. 이에 대해서 수급자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기대로 재직 중에 저축을 덜 했을 가능성과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금의 존재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현주(2019)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차년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수준, 소비수준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약 6배 많으며,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52%는 취업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에서도 두 연금 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균등화소득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소 수급시작시점이 늦을수록, 월평균 수급액이 많을수록 높았는데,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월평균 수급액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구균등화지출에는 공적연금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패널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허만형(2017)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를 통해 공적연금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2015년)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 그룹과 특수직역 수급자 그룹 사이에는 심각한 불평등 현상이 존재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평균 27만원이고 5만원에서 75만원 범위였고,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은 평균 170만원이고 12만원에서 390만원 사이였다. 또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취업률이 23%에 불과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54.5%에 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보충적 수입을 위해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연금 사이의 불평등에 관한 실증적인 증거를 보였다.

김태일·박규성(2014)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수평적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연금 개혁 이후 각 취업 연도별로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생애보수를 비교하였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규모는 국민연금 가입자, 즉 민간기업 종사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공적연금과 소비

강성호·임병인(2011)은 국민노후보장패널 2차 자료(2007년)를 이용하여 연금자산 존재유무 및 형태가 노인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공적·사적 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 가구에 비해 소비 성향이 높은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고, 소비지출 증가 유인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 성향이 줄어든다고 하나, 고정적인 소득의 발생을 통해 소비 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서영빈·송헌재, 2015).

김경아(2011)는 1~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가구의 소비여력 및 가구소비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소비여력이 높으며,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일수록 가구 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일수록 가구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중·고령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최령·황병덕(2016)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차년도(2013년)자료를 이용하여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국민연금수급자 간의 은퇴 이후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월평균 가계지출비용과 보건의료비지출비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수급자에 비해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가계지출비용이 32.8%, 보건의료비지출비용이 31.9% 높았다. 이 연구는 2013년도 데이터만을 활용함으로써 패널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장현주(2019)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차년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수준, 소비수준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였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월평균 수급액만이 가구균등화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가구균등화지출에는 공적연금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 다. 공적연금과 저축

펠드스타인(Feldstein)(1974)의 연구는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구적인 연구이다. 1929년에서 1971년까지(1941년에서 1946년 제외)의 미국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제도로 인해 저축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바로(Barro)(1978)는 유산 상속 동기로 인해 연금이 증가하는 만큼 저축이 증가한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레이머와 레즈노이(Leimer and Lesnoy)(1982)는 펠드스타인(Feldstein)이 사용한 사회보장자산(SSW)변수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추정한 결과, 연금의 증감이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본인의 연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비나 저축을 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펠드스타인(Feldstein)(1996)은 문제점을 수정하고 기간을 1992년까지 확장하여 다시 추정한 결과, 연금은 저축을 60%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김원식(1993)은 펠드스타인(Feldstein)(1987)의 모형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의 후생비용을 측정한 결과, 국민연금은 저축을 상당 부분 대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실증자료를 토대로 개발된 후생함수모형으로 분석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윤나영, 2003:22).

김상호(2007)는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에서 8차 년도(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자산이 가계 저축을 대체하는지 분석한 결과, 90% 신뢰 수준에서 약 0.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가입자 확대가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가계 저축을 구축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임경목·문형표(2003)는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 및 미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공적연금 가입자 수 확대가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1993년에서 1998년까지 대우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제도는 가계 금융자산을 구축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국민연금제도는 미미한 효과만 나타났다(차은영·김수현, 2013:170).



### 제 3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공적연금 관련 기존 연구는 공적연금이 소득, 소비,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빈곤완화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서야 공적연금 수급자 간의 소득이나 소비, 삶의 만족도, 형평성 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는 과거 자료의 한계로 주로 단 년도를 기준으로 횡단면 분석을 하고 있으며, 패널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분석의 시계열이 짧다. 또한 분석 대상에 있어서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로만 구분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노인가구주를 대상으로 가구 단위 분석을 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는 도입 시기 뿐만 아니라 월평균 수급액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기에 공적연금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금 수급 대상자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만큼 최신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인 수준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 제 3 장 연구의 설계

### 제 1 절 연구문제 및 변수의 설정

#### 1. 연구문제 및 가설

이번 연구는 공적 연금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특수직역연금수급여부와 공적연금수급여부가 고령층의 재정 상태-소득, 소비, 자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비교를 한 후, 공적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포함한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분석을 한 번 더 시행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특수직역연금수급여부와 공적연금수급여부에 따라 재정 상태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인 경우와 공적연금수급자인 경우에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소비, 자산 각각 측면에서 불평등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적 지위의 형평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 1) 연구문제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며 각 집단의 재정 상태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직역/공적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와 재정 상태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둘째, 특수직역/공적연금수급자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특수직역/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의 불평등도는 어느 정도인가?

## 2) 연구가설

연금수급자는 연금소득이 있기에 비수급자에 비해 재정 상태가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연구가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가설 1-1	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1-3	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자산수준이 높을 것이다.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	
가설 2-1	공적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공적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2-3	공적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자산수준이 높을 것이다.

## 2. 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 사용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변수의 설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	특성
종속변수	소득	총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공적사적이전소득+개인연금소득+기타소득	연속
		근로소득	임금소득+자영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	
		자산소득	금융소득+부동산소득	
	소비	총소비	가구균등화소비= 가구총소비/ $\sqrt{\text{가구원수}}$ (만원) 총소비=생활비+식비+외식비+공/사교육비+주거비+보건의료비	
		총자산	부동산자산+금융자산+사업체농장자산+기타자산	
	자산	부동산자산	거주주택부동산+거주주택외부동산+부동산 임차	
		금융자산	현금예적금총액+주식투자신탁채권가격+보험총자산+빌려준돈+타지않은갯돈+기타금융자산	
		총부채	거주주택부채+임대보증금+부어야할갯돈+금융기관대출금+개인부채+기타부채	
독립변수	특수직역연금수급여부		수급=1 / 비수급=0	명목
	공적연금수급여부		수급=1 / 비수급=0	
통제변수	연령		한국나이	연속
	성별		여성=1 / 남성=0	명목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1/ 대졸 이상=2	
	거주지역		대도시=0 / 중소도시=1 / 읍면부=2	
	배우자유무		유배우자=1 / 무배우자=0	
	경제활동상태		취업=1 / 미취업=0	

## 1) 종속변수

### 가. 소득

우선,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총소득을 비교하여 각 집단의 전체 소득규모를 살펴본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개인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소득은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을 말하고, 자산소득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된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회보장소득의 합이며, 사적이전소득은 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개인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통해 받는 소득을 말하고, 기타 소득은 저작권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임금소득, 자영업소득, 농어업소득, 부업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임금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소득이고, 자영업소득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소득이다. 농어업소득은 농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부업소득은 부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자산소득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을 말한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으로부터 월세, 지대 등의 정기적인 수입을 말한다.

고령층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 의존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소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소비항목은 가구 수준에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동거하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조정한 균등화지수(square root scale)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수 제곱근으로 소비를 나누는 균등화 과정을 통해 가구원 1인당 소비를 구함으로써 다른 변수와 비교 가능한 개인 단위로 환산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소비 항목인 총소비는 생활비,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 다. 자산

본 연구에서 자산은 저축과 부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사업체·농장자산, 기타 자산의 합이다.

부동산자산은 거주주택 부동산과 거주주택 외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임차로 구성된다. 금융자산은 50만 원 이상의 현금, 은행예금, 주식·투신·뮤추얼펀드와 채권 가격, 보험, 빌려준 돈, 타지 않은 갯돈, 기타의 합으로 구성된다.

총부채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부어야 할 계와 기타의 합으로 구성된다.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중 어느 집단이 자산이나 부채가 많으며, 부동산자산이나 금융자산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특수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공적직역연금 수급 여부이다. 공무원연금으로 대표되는 특수직역연금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경우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가설1]의 검정에서는 공무원연금이 주 대상인 특수직역연금수급자(=1)를 대상으로 비수급자(=0)와 비교하고, [가설2]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급자(=1)를 대상으로 비수급자(=0)와 비교한다.

## 3) 통제변수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상태를 설정한다.

우선, 연령과 성별,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연령은 고령층인 55세에서 7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성별은 여성(=1) 여부를 포함하였다. 거주지역은 대도시(=0)를 기준으로 중소도시(=1)와 읍면부(=2)로 나누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많은 기존 연구에서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이나 교사 등이었기에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이거나 대졸 이상일 것이다. 반면 고령층의 평균적인 학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수준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에서 제공하는 최종학력 자료를 재가공하여 중졸이하(=0)인 경우를 기준으로, 고졸(=1), 대졸 이상(=2)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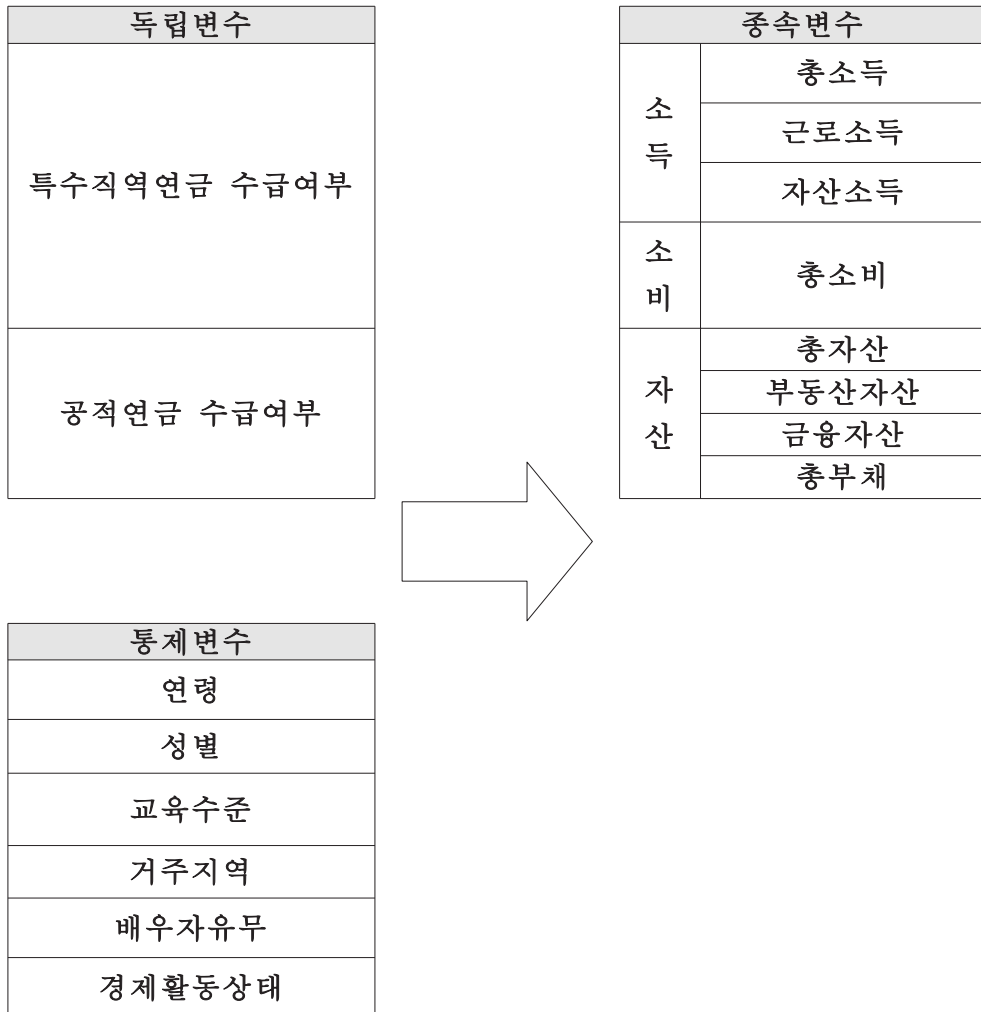
배우자유무는 현재 혼인상태와 관련한 항목을 사용했는데, 해당 결과는 혼인 중,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미혼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성향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배우자와 혼인 중인 경우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1)와 나머지를 배우자가 없는 경우(=0)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하여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다(김수완·조유미, 2006:32). 따라서 경제활동상태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현재 경제활동상태와 관련한 항목을 취업자(=1)와 미취업자(=0)로 다시 구분하였다.



### 3. 연구의 분석틀

[그림-1] 연구의 분석틀



## 제 2 절 분석모형의 구성

### 1. 분석 자료

특수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고령층의 재정 상태의 차이와 재정 상태에 미치는 요인, 그리고 형평성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차(2008년)에서 6차(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자료를 활용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형성과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원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45세 이상자(1962년 이전 출생) 중 임의 표집된 10,254명이다. 현재까지 7차에 걸친 조사가 완료되었다. 5차 조사에서 1962년생과 1963년생 920명 표본이 추가되었다.

2006년부터 짝수 연도에는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부터는 홀수 연도에는 기본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2차에서 6차까지 라이트 버전(light version) 자료를 사용하였다. 1차 자료의 경우 소비 항목에 대한 정보가 조사되지 않았거나 측정 수준이 다른 자료와 다른 경우가 있어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으며, 7차 자료의 경우 조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라이트 버전 자료는 주요 변수를 선정하

여 가공한 자료로 신규 패널을 포함하지 않았고 기존 패널에 한하여 구현되었다.

패널자료(panel data)는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를 합쳐놓은 것이다.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는 특정 개체의 특성을 시간 순으로 조사한 것을 말하며,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는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체의 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즉, 패널자료는 여러 개체를 시점 별로 조사한 자료이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합동(pooled) 횡단면자료는 서로 다른 개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패널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패널자료의 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횡단면자료는 정태적인 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에 패널자료로는 동태적인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동일한 개인이 반복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모형에서 변수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질적인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어 모형설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패널자료를 통해서는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으며, 선형회귀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6:2-3).

다음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공적연금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단년도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정태적인 관계를 보고 있다. 따라서 횡단면자료가 아닌 패널자료를 통해서 동태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연구는 주로 과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최신의 자료를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소득과 소비, 자산을 구성하였다. 기본 조사 단위는 개인 베이스이나, 소비 영역은 가구 베이스이기에 개인화하여 사용하며, 월평균 지출을 말한다. 다른 기본적인

항목은 모두 조사 시점의 이전 연도 한해가 기준이고, 자료의 단위는 만 원이다.

## 2. 분석대상

일반적으로 노인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정책적인 이유로 고령층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 2018년 5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고령층의 연령을 55세에서 79세까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55세에서 79세까지를 ‘고령층’으로 규정하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한다. 통계청의 기준에 따른 경우 향후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령층 자료와 비교함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리라 판단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특수직역연금/공적연금 수급자이고, 비교집단은 비수급자이다. 연금 수급자 집단과 비수급자 집단을 비교하려면 준실험설계에 의한 인과추론을 해야 한다.

준실험설계(quasi experimental design)는 무작위배정에 의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등화를 꾀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설계방법이다. 즉, 무작위배정에 의한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설계이다(남궁근, 2017:28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배정을 통한 동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외재적 변수의 영향을 모두 통제하거나 배제하기가 어렵다(남궁근, 2017:2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짝짓기(matching)를 통해 가능한 한 실험집단(수급자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

(비수급자집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각 집단의 재정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우선 기술통계를 한다. 각 항목의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다. 산술평균(arithmetic mean)은 측정값 자료를 모두 합한 후 빈도수로 나눴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중앙경향값의 측정수단이다. 평균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분포상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를 측정한다.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통해 산포도를 보며 산술평균에서 각 자료들의 값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을 평균하여 제곱근을 구해 산출한다(남궁근, 2017:606-607).

다음으로 두 집단 간에 재정 상태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한다. t검증은 독립변수가 양분범주로 되어 있고, 종속변수가 등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되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은 가설의 채택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오류를 범할 확률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01%( $\alpha = 0.001$ )의 유의수준을 통계적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 유의수준이 검증 관련 p값보다 적을 때 영가설을 기각한다(남궁근, 2017:625-626).

이러한 수급자와 비수급자집단의 비교 연구에서 타당성의 핵심은 연금 수급 여부 이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관심을 갖는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회귀분석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그런데 회귀모형을 이용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 집단의 다른 특성의 차이를 모두 통제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태일(2007)에 의하면 이는 분석기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점

이라고 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산점도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선형 관계인 것을 파악한다. 그리고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의 가설검증은 회귀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과 회귀계수에 대한 검증으로 구분된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검증은 F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그리고 회귀계수에 대한 검증은 p값이 유의수준보다 적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낸다(남궁근, 2017:647-651).

또한 본 연구에서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재정적 지위 상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정적 지위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를 사용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완전 평등일 경우에는 0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손병돈, 2009:1451).

#### 4.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귀모형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 X + \epsilon_i$$

$$i = 1, 2, \dots, n$$

위 식에서  $n$ 은 패널 개체 수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선형회귀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4] 분석모형

모형1
$Y_{i,t} = a + b_1 \text{ 특수직역연금수급}_t + b_2 \text{ 연령}_t + b_3 \text{ 성별}_t + b_4 \text{ 교육수준}_t + b_5 \text{ 거주지역}_t + b_6 \text{ 교육수준}_t + b_7 \text{ 배우자유무}_t + b_8 \text{ 경제활동상태}_t + e$
모형2
$Y_{i,t} = a + b_1 \text{ 공적연금수급}_t + b_2 \text{ 연령}_t + b_3 \text{ 성별}_t + b_4 \text{ 교육수준}_t + b_5 \text{ 거주지역}_t + b_6 \text{ 교육수준}_t + b_7 \text{ 배우자유무}_t + b_8 \text{ 경제활동상태}_t + e$
$Y_i = \text{총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총부채}$ $t = 2008, 2010, 2012, 2014, 2016$

## 제 4 장 분석결과

###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 1)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 1,151명이고 비수급자는 26,385명이다. 평균 연령은 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 68.9세이고, 비수급자는 66.4세로 비수급자가 다소 적긴 하나 비슷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수급자의 성비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남성이 77%이고 여성이 23%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비수급자는 남성 43%, 여성 57%로 여성이 약간 많다. 이는 과거 공무원, 교사, 군인 등에 종사했던 대다수가 남성이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에 있어서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대졸이상 비율에 있어서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대졸이상 비율이 42%에 달하는 반면 비수급자는 8%에 불과하다. 비수급자의 경우 절반 이상의 비율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령층 대다수의 일반적인 학력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대다수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주 지역과 배우자유무에 있어서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 82%가 미취업자인 반면 비수급자는 40%정도나 취업상태에 있다. 취업상태 여부가 노후의 보충적인 소득과 연관이 있다면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연금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5]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비수급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대상자 (27,536명)		1,151	4%	26,385	96%
평균 연령(세)		68.9		66.4	
성별	남성	887	77%	11,296	43%
	여성	264	23%	15,089	57%
교육수준 (27,533명)	중졸이하	284	25%	17,535	66%
	고졸	389	34%	6,855	26%
	대졸이상	478	42%	1,992	8%
거주지역	대도시	535	46%	11,067	42%
	중소도시	390	34%	8,369	32%
	읍면부	226	20%	6,949	26%
배우자유무	유배우자	965	84%	20,921	79%
	무배우자	186	16%	5,464	21%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11	18%	10,658	40%
	미취업자	940	82%	15,727	60%

## 2)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경우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공적연금수급자로 넓혀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국민연금수급자를 포함한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적연금수급자는 7,972명이고 비수급자는 19,564명이다. 평균연령은 공적연금수급자는 68.9세이고, 비수급자는 65.6세로 공적연금수급자가 다소 많긴 하나 비슷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수급자의 성비는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 여성이 65%인 반면, 비수급자는 남성이 64%이다. 공적연금수급을 할 경우 노후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 노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알려진 바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대상자에 있어서 유족연금 등을 고려할 경우 이런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앞서 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는 비율상 차이가 뚜렷한 점과 달리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포함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주 지역과 배우자유무에 있어서는 앞서 본 경우와 같이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비율이 4:6으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앞서

본 경우에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가 8:2 정도였고, 비수급자의 경우가 4:6 정도였다. 이는 공적연금수급자에 국민연금수급자가 포함되었기에 국민연금수급자의 경우 보충적인 근로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표-6]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공적연금수급자		비수급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대상자(27,536명)		7,972	29%	19,564	71%
평균 연령		68.9		65.6	
성별	남성	2,753	35%	12,600	64%
	여성	5,219	65%	6,964	36%
교육수준 (27,533명)	중졸이하	4,847	61%	12,972	66%
	고졸	2,208	28%	5,036	26%
	대졸이상	917	12%	1,553	8%
거주지역	대도시	3,222	40%	8,380	43%
	중소도시	2,538	32%	6,221	32%
	읍면부	2,212	28%	4,963	25%
배우자유무	유배우자	6,019	76%	15,867	81%
	무배우자	1,953	24%	3,697	19%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003	38%	7,866	40%
	미취업자	4,969	62%	11,698	60%

## 2. 재정 상태 비교

### 1)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경우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 측면에서 총소득, 총소득, 자산소득을, 소비 측면에서 총소비를, 자산 측면에서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총부채를 살펴보았다. 각 항목의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총소득, 총소비,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항목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 총소득, 총소비,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항목에 있어서 비수급자 집단에 비해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집단 간의 연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2,825만원인 반면, 비수급자는 1,107만원으로 특수직역연금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월별 평균 총소비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가 183만원인 반면, 비수급자는 135만원이다.

총자산은 특수직역연금수급자가 2억 8,583만원을 보유한 반면, 비수급자는 1억 7,090만원으로 특수직역연금수급자가 1.5배 이상 높다. 자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자산에 있어서 특수직역연금수급자

가 2억 8,236만원이고, 비수급자가 2억 8만원이다. 금융자산은 특수직역 연금수급자가 4,374만원이고, 비수급자가 2,598만원이다.

나머지 항목인 근로소득, 자산소득, 총부채에 있어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7]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

구분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비수급자			t값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소득	총소득	1138	2825.4	1567.4	24237	1107.5	1540.4	-36.73 ***
	근로 소득	245	1732.7	1730.6	10320	1751.0	1853.5	0.15
	자산 소득	368	294.7	524.3	4523	287.3	641.0	-0.21
소비	총소비	622	183.4	94.7	16145	135.9	87.9	-13.18 ***
자산	총자산	1046	28583.8	33110.2	19948	17090.9	27730.9	-12.92 ***
	부동산 자산	937	28236.9	30554.8	15199	20008.7	28586.7	-8.51 ***
	금융 자산	715	4374.7	8560.8	12276	2598.9	5871.9	-7.62 ***
	총부채	259	7297.0	12371.3	4506	7037.2	11067.9	-0.36
* p<.01, ** p<.05, *** p<.001								

## 2)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경우

다음으로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바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소득 측면에서 총소득, 총소득, 자산소득을, 소비 측면에서 총소비를, 자산 측면에서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총부채를 살펴보았다. 각 항목의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총소득, 근로소득, 총소비,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항목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재정 상태의 차이와 비교해보면,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서 근로소득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적연금수급자는 총소득,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에 있어서 비수급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근로소득과 총소비에 있어서는 비수급자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총소비에 있어서도 비수급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 것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집단 간의 연평균 소득을 보면,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 1,424만원이나, 비수급자는 1,076만원이다. 앞서 살펴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2,825만원이고 비수급자와 차이가 1,718만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348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공적연금을 수급할 경우 총소득 측면에서 비

수급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자가 1,385만원이고, 비수급자가 1,906만원으로 비수급자가 더 높다. 비수급자는 특수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기에 노후에 추가적인 근로를 통해 노후 소득을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별 총소비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에 비해 모두 50여만 원 정도 낮은 수치이나, 공적연금수급 133만원, 비수급자가 139만원으로 비수급자가 약간 높다.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는 일시 소득보다 항상소득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금현섭·백승주(2014)에 따르면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항상소득이 있어 소비를 더 증가시킬 유인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석 결과는 이와 다르다. 이는 아마도 비수급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의 영향이 항상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총자산은 공적연금수급자가 2억 1,712만원을 보유한 반면, 비수급자가 1억 5,708만원으로 공적연금수급자가 1.2배 이상 높다. 자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자산에 있어서 공적연금수급자가 2억 2,409만원이고, 비수급자가 1억 9,343만원이다. 금융자산은 공적연금수급자가 2,967만원, 비수급자가 2,572만원이다. 앞서 살펴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자산 항목에 있어서는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가 더 높은데,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자산 항목에 있어서는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가 더 높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금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증가할 경우 저축이 감소함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특수직역연금수급자나 공적연금수급자 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총자산과 부동산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모두 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자산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은 기존 연구와 큰 차이로 할 수 있다. 자산이 있을 경우 보다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금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연금 소득도 있으면서 자산 수준도 높기에 비수급자에 비해 노후 수준에 있어서 보다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총소득에 있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과 달리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총소득은 불과 348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에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주된 차이는 자산 항목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끝으로 나머지 항목인 자산소득, 총부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8]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가계 재정 상태

구분		공적연금수급자			비수급자			t값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소득	총소득	7900	1424.0	1363.7	17475	1076.3	1660.1	-16.29 ***
	근로 소득	3166	1385.8	1286.3	7399	1906.7	2025.2	13.36 ***
	자산 소득	1754	299.2	603.1	3137	281.6	649.0	-0.92
소비	총소비	4624	133.9	81.5	12143	139.1	91.1	3.37 ***
자산	총자산	6838	21712	28583.6	14156	15708.0	27703.9	-14.56 ***
	부동산 자산	6018	22409.2	27935.1	10118	19343.0	29193.7	-6.55 ***
	금융 자산	4087	2967.4	6078.0	8904	2572.4	6054.0	-3.44 ***
	총부채	1765	7302.5	11444.2	3000	2903.6	10958.5	-1.19
* p<.01, ** p<.05, *** p<.001								

##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 1. 특수직역연금수급자 재정 상태의 영향요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평균 소득수준과 소비수준, 자산수준 차이가 특수직역연금의 수급 여부에 따라 영향이 있다면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 정책에 있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총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총부채에 대해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다섯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먼저, 모형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는 통제변수들 중 하나씩을 추가로 빼가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2는 경제활동상태를 빼고 분석하였고, 모형3은 경제활동상태와 배우자유무, 모형4는 경제활동상태와 배우자유무 그리고 교육수준을, 모형5는 경제활동상태,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거주지역을 빼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통제변수를 제외시키고 분석해봄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추정계수가 얼마나 강건한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헨(Cohen,1988)의 기준을 따라 결정계수  $R^2$ 가 0.26이상일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총소득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  $R^2$ 이 0.25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 즉,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인 경우 총소득이 1,410만원 증가하고, 근로소득의 경우 508만원 감소한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인 경우 총소득에 있어서 1% 유의수준에서 연령(-),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대도시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취업자일수록 총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특징적인 점은 총소득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소득이 증가하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소득이 증가한다.

[표-9]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소득			소비	자산			
	총 소득	근로 소득	자산 소득	총 소비	총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
상수항	3104.3 ***	4852.5 ***	115.3 ***	237.3 ***	10451.6 ***	1786.9 ***	3642.0 ***	-84.7 ***
특수자 (=1)	1410.2 ***	-508.3 ***	-126.0 ***	24.9 ***	2035.5 **	-59.1 ***	243.4 ***	-2061.0 ***
연령	-30.0 ***	-60.3 **	1.50 ***	-1.9 ***	74.93 **	101.18 ***	-29.3 ***	59.4 **
성별	-591.1 ***	-601.5 ***	-36.11 *	11.0 ***	-6203.7 ***	3507.9 ***	-2.11 ***	1119.0 ***
거주지역	-42.2 ***	13.62 ***	31.56 ***	-9.4 ***	-350.6 ***	-961.1 ***	102.5 ***	-115.8 ***
교육수준	520.9 ***	860.59 ***	121.7 ***	44.68 ***	9958.3 ***	10619.0 ***	1880.0 ***	3385.0 ***
배우자 유무	-264.5 ***	165.81 ***	48.47* ***	14.9 ***	472.0 ***	8343.9 ***	229.4 ***	1229.9 ***
경제활동 상태	902.1 ***	474.75 ***	-102.1 ***	12.14 ***	438.3 ***	-903.2* ***	-600.3 ***	-197.8 ***
표본수	25372	10565	4891	16766	20992	16134	12991	4765
$R^2$	0.31	0.25	0.02	0.19	0.08	0.08	0.05	0.04
* p<0.1, ** p<.05, *** p<.01								

[표-10]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총소득

변수	소득				
	총소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3104.3*** (101.32)	5081.9*** (96.27)	4639.7*** (89.28)	5174.2*** (85.11)	5711.5*** (85.10)
특수자 (=1)	1410.2*** (41.68)	1189.2*** (43.21)	1195.8*** (43.33)	1542.3*** (42.99)	1544.8*** (42.97)
연령	-30.0*** (1.34)	-52.9*** (1.30)	-49.9*** (1.28)	-60.8*** (1.26)	-61.0*** (1.26)
성별	-591.1*** (18.90)	-835.3*** (18.97)	-771.6*** (18.27)	-955.1*** (17.81)	-955.1*** (17.8)
거주지역	-42.2*** (10.44)	42.8*** (10.73)	37.5*** (10.75)	-17.46 (10.85)	
교육수준	520.9*** (14.39)	513.0*** (15.0)	503.1*** (15.0)		
배우자 유무	-264.5*** (21.62)	-272.1*** (22.5)			
경제활동 상태	902.1*** (19.07)				
표본수	25,372	25,372	25,372	25,372	25,372
Adj $R^2$	0.31	0.25	0.25	0.21	0.21
*p <0.1, **p<.05, ***p<.01					

[표-11]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근로소득

변수	소득				
	근로소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4852.4*** (190.24)	5541.6*** (181.16)	5768.0*** (168.89)	7889.4*** (164.60)	8004.4 (162.94)
특수자 (=1)	-508.3*** (104.85)	-565.0*** (2.59)	-566.5*** (105.4)	-28.5 (109.53)	-23.8 (109.64)
연령	-60.3*** (2.61)	-64.7*** (2.59)	-65.9*** (2.57)	-88.87*** (2.60)	-92.0*** (2.52)
성별	-601.5*** (36.04)	-645.47*** (36.04)	-687.0*** (25.93)	-997.7*** (34.37)	-1003.2*** (34.39)
거주지역	13.6 (19.52)	21.1 (19.62)	22.71 (19.63)	-95.6*** (20.30)	
교육수준	860.5*** (25.77)	865.3*** (25.92)	867.3*** (25.93)		
배우자 유무	165.8*** (46.11)	159.6** (46.38)			
경제활동 상태	474.7*** (42.21)				
표본수	10,565	10,565	10,565	10,565	10,565
Adj $R^2$	0.25	0.24	0.24	0.16	0.16
*p <0.1, **p<.05, ***p<.01					

[표-12]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자산소득

변수	소득				
	자산소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115.3 (113.40)	-104.3 (104.70)	-15.5 (95.45)	299.9*** (89.70)	299.8*** (89.69)
특수자 (=1)	-126.0*** (36.51)	-103.5*** (36.32)	-107.4*** (36.28)	-12.5 (35.05)	-12.9 (35.00)
연령	1.5 (1.49)	-3.9*** (1.41)	3.3** (1.38)	0.2 (1.35)	0.3 (1.34)
성별	-36.1* (20.76)	-3.5 (19.75)	-14.6 (19.00)	-64.1*** (18.37)	-64.2*** (18.36)
거주지역	31.5*** (11.71)	20.8* (11.53)	21.9* (11.52)	2.4 (11.42)	
교육수준	121.7*** (13.80)	123.8*** (13.82)	125.7*** (13.79)		
배우자 유무	48.4* (26.49)	54.6** (26.52)			
경제활동 상태	-102.1*** (20.53)				
표본수	4,891	4,891	4,891	4,891	4,891
Adj $R^2$	0.02	0.01	0.01	0.00	0.00
*p <0.1, **p<.05, ***p<.01					



[표-13]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총소비

변수	소비				
	총소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237.3*** (7.53)	260.7*** (7.01)	288.7*** (6.50)	388.3*** (6.30)	385.7*** (6.34)
특수자 (=1)	24.9*** (3.39)	22.4*** (3.38)	21.8*** (3.39)	52.4*** (3.46)	54.4*** (3.48)
연령	-1.9*** (0.09)	-2.2*** (0.09)	-2.4*** (0.09)	-3.5*** (0.09)	-3.6*** (0.09)
성별	11.0*** (1.50)	7.7*** (1.45)	4.8*** (1.42)	-10.9*** (1.44)	-9.7*** (1.44)
거주지역	-9.4*** (0.78)	-8.0*** (0.77)	-7.8*** (0.77)	-12.0*** (0.80)	
교육수준	44.6*** (1.12)	44.4*** (1.12)	45.3*** (1.12)		
배우자 유무	14.9*** (1.40)	14.7*** (1.41)			
경제활동 상태	12.1*** (1.43)				
표본수	16,766	16,766	16,766	16,766	16,766
Adj $R^2$	0.19	0.19	0.18	0.10	0.09
*p <0.1, **p<.05, ***p<.01					

[표-14]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총자산

변수	자산				
	총자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10451.6*** (2300.8)	11415.8*** (2103.50)	12199*** (1926.80)	35394.4*** (1830.20)	35317.1*** (1831.93)
특수자 (=1)	2035.5** (896.64)	1923.5** (890.07)	1914.7** (890.02)	8907.3*** (884.06)	9138.1*** (884.19)
연령	74.9** (30.47)	63.9** (28.54)	58.2** (27.88)	-182.0*** (27.52)	-200.7*** (27.39)
성별	-6203.7*** (431.13)	-6331.4*** (413.08)	-6460.0*** (389.13)	-9897.35** * (383.25)	-9903.4*** (383.62)
거주지역	-350.6 (237.72)	-308.6 (234.22)	-296.5 (233.86)	-1525.0*** (236.30)	
교육수준	9958.3*** (310.79)	9950.4*** (310.69)	9970.7*** (309.93)		
배우자 유무	472.0 (500.49)	464.4 (500.44)			
경제활동 상태	438.3 (423.88)				
표본수	20,992	20,992	20,992	20,994	20,994
Adj $R^2$	0.08	0.08	0.08	0.04	0.04
*p <0.1, **p<.05, ***p<.01					

[표-15]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부동산자산

변수	자산				
	부동산자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1786.9 (2689.59)	-280.3 (2437.17)	12635.8*** (2260.34)	38411.3*** (2162.80)	38380.2*** (2166.69)
특수자 (=1)	-59.1 (976.86)	176.1 (33.19)	77.9 (973.86)	7743.1*** (969.43)	8069.5*** (970.25)
연령	101.1*** (35.74)	125.2*** (33.19)	40.3 (32.79)	-226.7*** (32.56)	-254.0*** (32.43)
성별	3507.9*** (555.15)	3746.6*** (539.41)	54.8 (469.95)	-3795.6*** (466.43)	-3835.7*** (467.24)
거주지역	-961.1*** (276.8)	-1043.8*** (273.10)	-765.4*** (273.92)	-2140.6*** (278.1)	
교육수준	10619.0*** (354.36)	10631.6*** (354.32)	11003.3*** (355.32)		
배우자 유무	8343.9*** (608.90)	8341.3*** (608.94)			
경제활동 상태	-903.2* (497.16)				
표본수	16,134	16,134	16,134	16,136	16,136
Adj $R^2$	0.08	0.08	0.07	0.01	0.01
*p <0.1, **p<.05, ***p<.01					

[표-16] 특수지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금융자산

변수	자산				
	금융자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3642.0*** (633.93)	2352.1*** (593.64)	2777.8*** (546.24)	7394.7*** (513.55)	7388.2*** (513.74)
특수자 (=1)	243.4 (242.07)	401.6* (240.30)	392.6 (240.27)	1770.3*** (236.23)	1805.4*** (236.08)
연령	-29.3*** (8.54)	-15.1* (8.08)	-18.1** (7.91)	-65.0*** (7.75)	-67.9*** (7.71)
성별	-2.11 (120.37)	188.4 (114.52)	135.8 (110.8)	-600.3*** (107.63)	-590.9*** (107.64)
거주지역	102.5 (66.91)	39.4 (65.81)	45.8 (65.73)	-217.2*** (64.82)	
교육수준	1880.0*** (86.84)	1894.7*** (86.88)	1905.8*** (86.67)		
배우자 유무	229.4 (140.22)	256.7* (140.25)			
경제활동 상태	-600.3*** (117.93)				
표본수	12,991	12,991	12,991	12,991	12,991
Adj $R^2$	0.05	0.04	0.04	0.01	0.01
*p <0.1, **p<.05, ***p<.01					

[표-17]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총부채

변수	자산				
	총부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84.7 (2043.81)	-580.2 (1830.75)	1459.9 (1661.50)	9912.3*** (1596.3)	9600.48*** (1593.09)
특수자 (=1)	-2061.0*** (722.42)	-2020.6*** (718.56)	-2053.4*** (718.90)	233.2 (718.18)	259.6 (718.57)
연령	59.4** (26.97)	65.2*** (24.76)	51.4** (24.22)	-34.3 (24.06)	-36.0 (24.07)
성별	1119.0*** (391.50)	1177.4*** (376.53)	724.4** (335.56)	-529.4 (332.14)	-509.8 (332.27)
거주지역	-115.8 (210.57)	-133.7 (207.98)	-105.1 (207.83)	-559.7*** (210.24)	
교육수준	3585.0*** (245.33)	3587.2*** (245.28)	3633.2*** (244.82)		
배우자 유무	1229.9*** (468.74)	1239.3*** (468.39)			
경제활동 상태	-197.8 (362.62)				
표본수	4,765	4,765	4,765	4,765	4,765
Adj $R^2$	0.04	0.04	0.04	0.00	0.00
*p <0.1, **p<.05, ***p<.01					

## 2. 공적연금수급자 재정 상태의 영향요인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도 평균 소득수준과 소비수준, 자산수준 차이가 공적연금의 수급 여부에 따라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적연금수급자의 총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총부채에 대해서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서와 같이 분석을 위해 다섯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먼저, 모형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는 통제변수들 중 하나씩을 추가로 빼가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2는 경제활동상태를 빼고 분석하였고, 모형3은 경제활동상태와 배우자유무, 모형4는 경제활동상태와 배우자유무 그리고 교육수준을, 모형5는 경제활동상태,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거주지역을 빼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통제변수를 제외시키고 분석해봄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추정계수가 얼마나 강건한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 모형에서도 결정계수  $R^2$ 가 0.26이상인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총소득과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총소득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 즉, 공적연금수급자인 경우 총소득이 227만원 증가하고, 근로소득의 경우 306만원 감소한다. 앞서 살펴 본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교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수급자일 경우보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일 경우에 총소득에 있어서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유의수준에서 연령(-),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상태(+)가 총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연령이 낮을

수록, 남성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취업자일수록 총소득이 높음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을 제외하고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도 총소득과 다르게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소득이 증가한다.

[표-18]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소득			소비	자산			
	총 소득	근로 소득	자산 소득	총 소비	총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
상수항	3000.4 ***	4584.5 ***	143.3	235.4 ***	10451.6 ***	1786.9	3642.0 ***	-84.7
공수자(=1)	227.1 ***	-306.2* **	-8.4	4.55 ***	2035.5 **	-59.1	243.4	-2061.0 ***
연령	-29.2 ***	-54.3 ***	0.9	-1.96 ***	74.93 **	101.18 ***	-29.3 ***	59.4 **
성별	-582.6 ***	-657.0 ***	-31.5	11.22 ***	-6203.7* **	3507.9 ***	-2.11	1119.0 ***
거주지역	-37.5 ***	13.3	30.54 ***	-9.4 ***	-350.6	-961.1 ***	102.5	-115.8
교육수준	627.5 ***	838.1 ***	108.5 ***	46.3 ***	9958.3 ***	10619.0* **	1880.0 ***	3385.0 ***
배우자유무	-246.0 ***	147.7 ***	51.9 *	15.39 ***	472.0	8343.9 ***	229.4	1229.9 ***
경제활동 상태	839.7 ***	4584.5 ***	-93.7 ***	11.34 ***	438.3	-903.2 *	-600.3* **	-197.8
표본수	25372	10565	4891	16766	20992	16134	12991	4765
$R^2$	0.28	0.26	0.02	0.19	0.08	0.08	0.05	0.04
* p<0.1, ** p<.05, *** p<.01								



[표-19]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총소득

변수	소득				
	총소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3000.4*** (103.30)	4875.6*** (97.26)	4471.1*** (90.46)	5732.2*** (87.49)	5726.8*** (87.49)
공수자 (=1)	277.1*** (19.38)	190.1*** (20.07)	214.5*** (20.00)	251.7*** (20.60)	251.4*** (20.60)
연령	-29.2*** (1.38)	-50.9*** (1.33)	-48.3*** (1.32)	-60.8*** (1.32)	-61.1*** (1.32)
성별	-582.6*** (19.95)	-814.6*** (19.9)	-748.9*** (19.08)	-980.0*** (18.76)	-980.3*** (18.77)
거주지역	-37.5*** (10.64)	41.8*** (10.87)	36.6*** (10.88)	-32.1*** (11.08)	
교육수준	627.5*** (14.27)	604.5*** (14.78)	594.8*** (14.79)		
배우자 유무	-246.0*** (22.17)	-256.3*** (22.98)			
경제활동 상태	839.7*** (19.34)				
표본수	25,372	25,372	25,372	25,372	25,372
Adj $R^2$	0.28	0.23	0.23	0.18	0.18
*p < 0.1, **p < .05, ***p < .01					

[표-20]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근로소득

변수	소득				
	근로소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 항	4584.5*** (193.48)	5311.9*** (184.30)	5506.7*** (172.99)	7515.0*** (169.99)	7624.4*** (168.49)
공수자 (=1)	-306.2*** (36.80)	-299.7*** (37.03)	-305.0*** (37.00)	-325.2*** (38.85)	-327.5*** (38.88)
연령	-54.3*** (2.73)	-59.2*** (2.71)	-60.1*** (2.69)	-81.2*** (2.75)	-84.2*** (2.67)
성별	-657.0*** (36.69)	-700.5*** (36.73)	-738.4*** (34.59)	-1056.2*** (34.88)	-1062.0*** (34.89)
거주지역	13.3 (19.48)	20.8 (19.59)	22.2 (19.59)	-93.3*** (20.24)	
교육수준	838.1*** (25.42)	840.8*** (25.58)	842.5*** (25.58)		
배우자 유무	147.7*** (46.06)	141.6*** (46.35)			
경제활동 상태	490.2*** (42.07)				
표본수	10.565	10.565			
Adj $R^2$	0.26	0.25	0.25	0.17	0.17
*p <0.1, **p<.05, ***p<.01					

[표-21]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자산소득

변수	소득				
	자산소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143.3 (113.54)	-64.3 (104.36)	25.0 (95.75)	298.5*** (91.03)	298.5*** (91.03)
공수자 (=1)	-8.4 (20.87)	-4.0 (20.89)	-11.17 (20.64)	-4.94 (20.78)	-4.87 (20.78)
연령	0.9 (1.52)	3.3** (1.44)	2.8** (1.42)	0.3 (1.40)	0.3 (1.39)
성별	-31.5 (21.70)	-1.1 (20.71)	-14.6 (19.74)	-64.5*** (19.02)	-64.5*** (19.01)
거주지역	30.5*** (11.72)	20.6* (11.55)	21.9* (11.54)	2.69 (11.40)	
교육수준	108.5*** (13.26)	112.5*** (13.26)	114.3*** (13.23)		
배우자 유무	51.9* (26.82)	57.7 (26.85)			
경제활동 상태	-93.7*** (20.42)				
표본수	4,891	4,891	4,891	4,891	4,891
Adj $R^2$	0.02	0.01	0.01	0.00	0.00
*p <0.1, **p<.05, ***p<.01					

[표-22]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총소비

변수	소비				
	총소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235.4*** (7.53)	257.7*** (7.00)	285.4*** (6.52)	388.4*** (6.37)	385.4*** (6.42)
공수자 (=1)	4.5*** (1.47)	4.2*** (1.47)	2.1 (1.46)	4.9*** (1.54)	4.6*** (1.55)
연령	-1.9*** (0.10)	-2.2*** (0.09)	-2.4*** (0.09)	-3.4*** (0.09)	-3.6*** (0.09)
성별	11.2*** (1.5)	8.1*** (1.49)	4.7*** (1.46)	-12.7*** (1.48)	-11.6*** (1.49)
거주지역	-9.4*** (0.78)	-8.1*** (0.77)	-7.8*** (0.77)	-12.5*** (0.80)	
교육수준	46.3*** (1.09)	45.9*** (1.09)	46.9*** (1.09)		
배우자 유무	15.3*** (1.42)	15.1*** (1.42)			
경제활동 상태	11.3*** (1.43)				
표본수	16,766	16,766	16,766	16,766	16,766
Adj $R^2$	0.19	0.18	0.18	0.09	0.08
*p <0.1, **p<.05, ***p<.01					

[표-23]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총자산

변수	자산				
	총자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11904.9*** (2300.08)	13039.0*** (2097.64)	14509.8*** (1931.12)	37553.0*** (1850.76)	37426.3*** (1852.77)
공수자 (=1)	4013.2*** (424.67)	3989.7*** (424.22)	3917.4*** (422.33)	4472.4*** (433.03)	4441.8*** (433.50)
연령	22.2 (30.92)	9.38 (28.99)	-0.42 (28.48)	-232.3*** (28.34)	-251.4*** (28.24)
성별	-5220.6*** (443.33)	-5370.6*** (425.40)	-5635.7*** (398.98)	-9348.1*** (393.17)	-9375.5*** (393.60)
거주지역	-404.3* (237.29)	-355.7 (233.81)	-331.6 (233.44)	-1645.9*** (236.09)	
교육수준	10004*** (301.42)	9984.6*** (301.00)	10024.4*** (300.20)		
배우자 유무	911.1* (501.75)	900.6* (501.68)			
경제활동 상태	505.2 (420.38)				
표본수	20,992	20,992	20,992	20,992	20,992
Adj $R^2$	0.09	0.09	0.09	0.04	0.04
*p <0.1, **p<.05, ***p<.01					

[표-24]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부동산자산

변수	자산				
	부동산자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3552.0 (2693.93)	3255.5 (473.23)	14880.4*** (2268.38)	40098.8*** (2190.32)	39998.4*** (2194.68)
공수자 (=1)	3219.0*** (473.87)	3255.5*** (473.23)	2825.5*** (475.15)	3495.1*** (489.28)	3455.7*** (490.23)
연령	49.7 (36.35)	69.3*** (33.81)	-10.9 (33.54)	-265.0*** (33.57)	-292.2*** (33.47)
성별	4252.5*** (564.17)	4449.0** (548.10)	562.1 (477.00)	-3495.4*** (473.71)	-3561.8*** (474.59)
거주지역	-1018.2*** (276.51)	-1084.8*** (272.77)	-793.3*** (273.66)	-2257.5*** (278.02)	
교육수준	10506.1*** (343.08)	10532.4*** (342.62)	10920.4*** (343.62)		
배우자 유무	8609.9*** (609.27)	8610.0*** (609.29)			
경제활동 상태	-723.6 (492.75)				
표본수	16,134	16,134	16,134	16,136	16,136
Adj $R^2$	0.08	0.08	0.07	0.01	0.01
*p <0.1, **p<.05, ***p<.01					

[표-25]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금융자산

변수	자산				
	금융자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3756.5*** (644.82)	2438.0*** (591.18)	2942.1*** (547.18)	7507.7*** (520.53)	7494.7*** (520.76)
공수자 (=1)	404.0*** (121.95)	434.7*** (121.92)	398.6*** (120.88)	504.5*** (123.24)	503.9*** (123.30)
연령	-34.4*** (8.68)	-19.9** (8.21)	-23.1*** (8.08)	-67.4*** (8.01)	-70.4*** (7.97)
성별	99.7 (124.57)	292.3** (118.81)	218.9* (114.26)	-598.5*** (110.83)	-590.9*** (110.87)
거주지역	99.0 (66.87)	36.4 (65.80)	44.5 (65.71)	-239.7*** (65.85)	
교육수준	1890.1*** (84.02)	1918.6*** (83.92)	1932.3*** (83.71)		
배우자 유무	288.3** (141.38)	318.2** (141.40)			
경제활동 상태	-596.4*** (117.05)				
표본수	12,991	12,991	12,991	12,991	12,991
Adj $R^2$	0.05	0.04	0.04	0.01	0.00
*p <0.1, **p<.05, ***p<.01					

[표-26] 공적연금수급자 다중회귀분석 결과 : 총부채

변수	자산				
	총부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상수항	491.3 (2049.62)	338.2 (1834.55)	2459.8 (1676.07)	10308.1*** (1621.46)	9979.7*** (1617.89)
공수자 (=1)	534.1 (349.46)	537.4 (348.88)	438.7 (347.39)	502.2 (354.96)	490.2 (355.16)
연령	44.1 (27.51)	45.9* (25.37)	32.9 (24.97)	-43.4* (24.94)	-44.8* (24.95)
성별	1323.3*** (400.24)	1341.7*** (384.84)	836.7** (341.34)	-447.7 (336.92)	-431.2 (337.09)
거주지역	-145.7 (210.65)	-151.1 (208.10)	-119.7 (207.96)	-564.4*** (210.19)	
교육수준	3430.2*** (239.93)	3431.7*** (239.73)	3479.6*** (239.31)		
배우자 유무	1331.3*** (471.38)	1334.5*** (470.94)			
경제활동 상태	-60.5 (361.50)				
표본수	4,765	4,765	4,765	4,765	4,765
Adj $R^2$	0.04	0.04	0.04	0.00	0.00
*p <0.1, **p<.05, ***p<.01					



## 제 3 절 불평등도 분석

### 1. 재정 상태 불평등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과 소비,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상태 차이 분석과 함께 각 집단의 재정적 지위를 포괄해서 살펴보기 위해 재정 상태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있어서 지니(Gini)계수를 활용하였다.

#### 가. 소득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 항목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인 경우 총소득과 자산소득에 있어서 비수급자보다 수치가 더 적으며, 비수급자인 경우 근로소득의 수치가 더 낮다. 즉,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인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소득과 자산소득이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총소득은 0.29로 다른 수치에 비해서 낮아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총소득은 비교적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항목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에 모든 항목에 있어서 비수급자보다 지니계수의 수치가 더 적었다.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 분배가 좀 더 개선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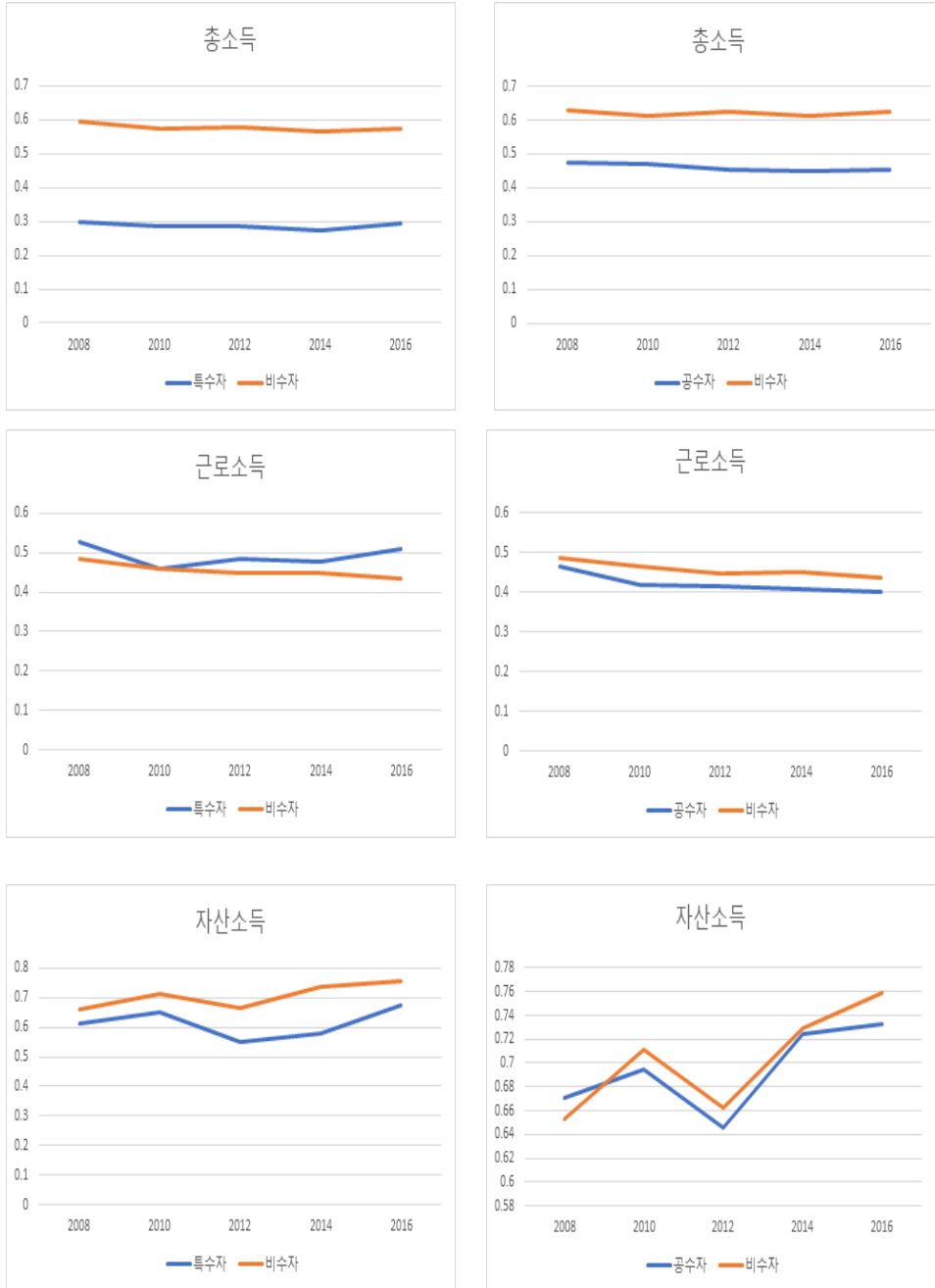
우려스러운 점은 자산소득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자산소득의 불평등성이 0.6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최근 들어 그 불평등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산소득에 있어서 2008년에는 비수급자가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낮았으나 2010년에는 비수급자의 자

산소득 불평등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표-27] 소득 항목 지니계수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비수급자		
	총소득	근로 소득	자산 소득	총소득	근로 소득	자산 소득
<b>Gini</b>	0.29041	0.49720	0.64486	0.57904	0.45801	0.71574
	공적연금수급자			비수급자		
	총소득	근로 소득	자산 소득	총소득	근로 소득	자산 소득
<b>Gini</b>	0.46146	0.42265	0.70566	0.62336	0.46323	0.71346

## [그림-2] 소득 항목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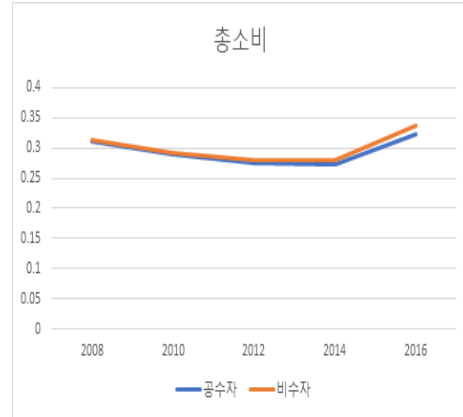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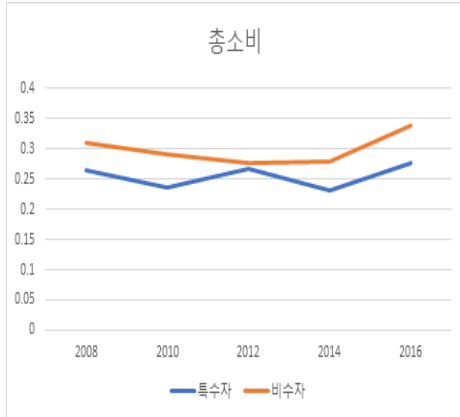
## 나. 소비

소비 항목의 지니계수는 소득이나 자산 항목에 비해서 0.2~0.3 정도로 비교적 수치가 낮았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보다도 소비가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에 있어서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수급자나 공적연금수급자가 총소비에 있어서 지니계수 수치가 더 낮아 비수급자에 비해 평등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28] 소비 항목 지니계수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비수급자
	총소비	총소비
Gini	0.25826	0.31682
	공적연금수급자	비수급자
	총소비	총소비
Gini	0.30012	0.32209

### [그림-3] 소비 항목 지니계수 추이



## 다. 자산

자산 항목은 지니 계수의 수치가 0.5나 0.6이 대다수일 정도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보다도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나 공적연금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항목에서 지니 계수의 수치가 더 적고, 총부채에 있어서는 비수급자의 수치가 더 적어 자산에 있어서 비수급자의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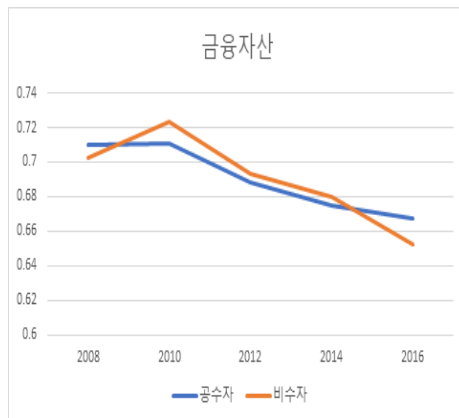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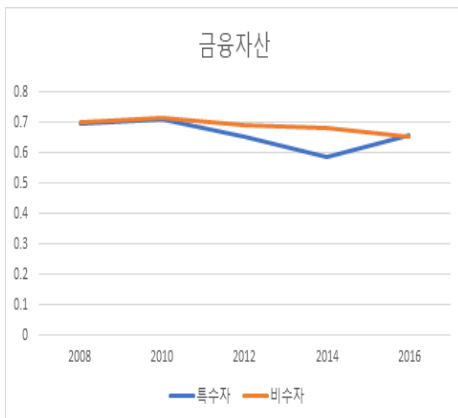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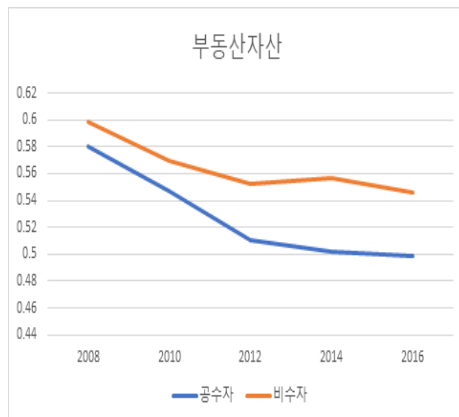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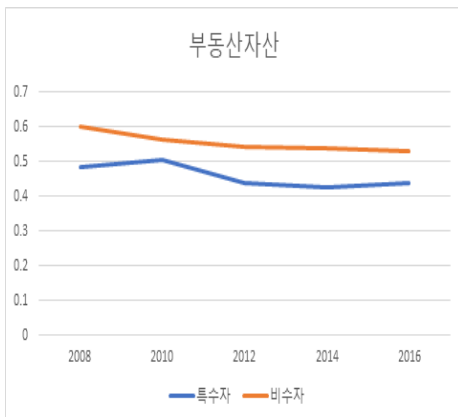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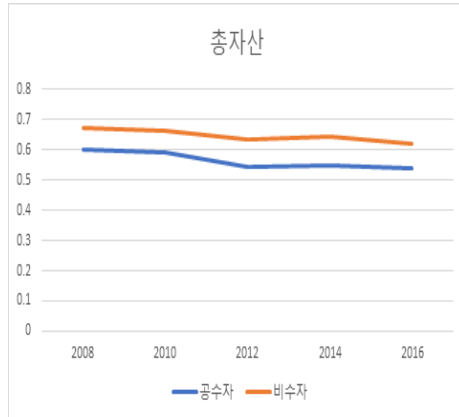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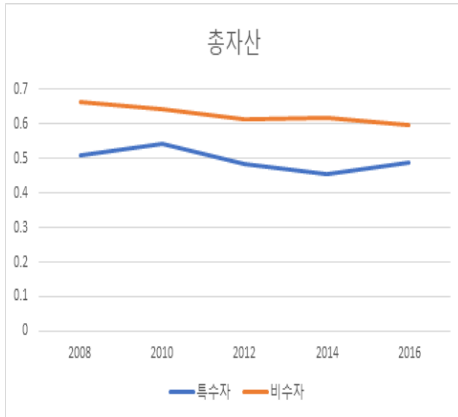
다행스러운 점은 부동산자산이나 금융자산의 높은 불평등성이 시간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으로 금융자산 지니계수 추이에서 2008년보다 2010년에 비수급자의 불평등이 수급자보다 높았으나, 2016년에는 2014년보다 공적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불평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자산은 소득과 다르게 실직이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유동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기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소득보다 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산 불평등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소득 불평등만 고려했다면 향후에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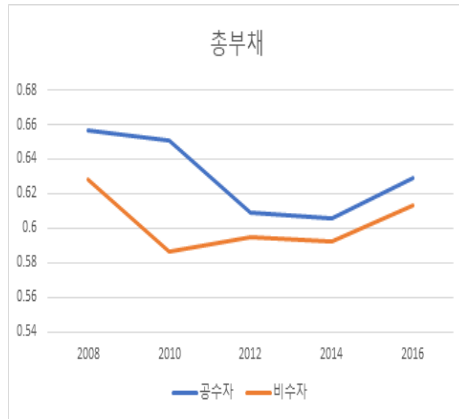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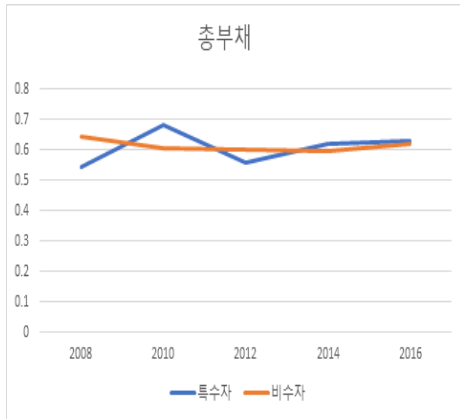
[표-29] 자산 항목 지니계수

	특수직역연금수급자				비수급자			
	총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	총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
<b>Gini</b>	0.50018	0.46296	0.66858	0.62507	0.62795	0.55850	0.69384	0.61926
	공적연금수급자				비수급자			
	총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	총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
<b>Gini</b>	0.56474	0.52722	0.69023	0.63483	0.64902	0.56887	0.69548	0.60947

[그림-4] 자산 항목 지니계수 추이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목적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재정 상태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특수직역/공적연금수급자는 비수급자와 재정 상태-소득, 소비, 자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는 총소득, 총소비,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항목에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고,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재정 상태에서는 근로소득이 추가되었다. 우선, 소득 수준에 있어서 총소득은 특수연금수급자가 2,825만원, 비수급자가 1,107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았으며, 공적연금수급자가 1,424만원, 비수급자가 1,076만원으로 약간 높았다. 다만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공적연금수급자가 1,385만원, 비수급자가 1,906만원으로 비수급자가 더 높았다. 다음으로 소비 수준에 있어서 월별 총소비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가 183만원이고 비수급자는 135만원으로 특수직역연금수급자가 높으나, 공적연금수급자는 133만원, 비수급자는 139만원으로 비슷하나 비수급자가 약간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산 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높았다. 총자산은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2억 8,583만원이고 비수급자는 1억 7,090만원으로 1.5배 이상 높았다. 부동산자산은 수급자가 2억 8,236만원, 비수급자가 2억 8만원, 금융자산은 수급자가 4,374만원, 비수급자가 2,598만원이었다.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가 2억 1,712만원, 비수급자가 1억 5,708만원으로 수급자가 1.2배 이상 높으며, 부동산자산은 수급자가 2억 2,409만원, 비수급자가 1억 9,343만원, 금융자산은 수급자가 2,967만원, 비수급자가 2,572만원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금이 있을 경우 저축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나 공적연금수급자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높은 자산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선행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둘째, 특수직역/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소득(+)과 근로소득(-)이었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총소득은 1,410만원 증가하고, 근로소득은 508만원 감소하며,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 총소득은 227만원 증가하고, 근로소득은 306만원 감소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취업자일수록 총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소득의 경우 거주지역의 영향은 없고 배우자가 있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아진다.

셋째, 특수직역/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정 상태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항목별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소득 항목에 있어서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경우 총소득은 0.29로 다른 수치들에 비해 유독 낮아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총소득은 비교적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자산소득은 모두 0.6이상인 가운데 비수급자의 자산소득은 0.71이상으로 자산소득에 있어서 불평등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비 항목에 있어서는 연금수급자가 수치가 더 낮았으나 소득이나 자산 항목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양자 모두에 있어서 수치가 0.2~0.3정도로 낮아 비교적 평등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산 항목에 있어서는 0.5 나 0.6 이상이 대부분일 정도로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는 부동산자산을 제외하고는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층의 재정 상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그리고 공적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나누어서 살펴봄으로써 각 집단에 있어서 차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재정 상태를 소득, 소비, 자산 수준으로 나누어 봄으로

써 특히 자산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수급자 모두에 있어서 비수급자에 비해 자산소득과 자산수준이 높았다. 연금 수급자는 연금 소득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에 따르는 안정성도 가지고 있었다. 자산이 있을 경우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이에 따르는 정책적인 접근에 있어서 소득 측면에서만 고려를 했다면 이제는 자산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보완하여 비교적 최신의 자료를 토대로 횡단면 분석이 아닌 패널 분석을 시행했으며,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공적연금수급자를 각각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장점이 있다. 다만 특수직역연금수급자와 공적연금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관련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대상자 선정 상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수급자(1,151명, 4%)와 공적연금수급자(7,972명, 29%)가 전체 분석대상자(27,536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에 동일 수준에서 비교할 경우 그 영향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소비 항목에 있어서 총소비 측면만 살펴보았으나 세부 지출항목별로 좀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강성호·임병인(2011), “연금자산 존재 및 형태의 노인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효과”, <경제연구> 29(1):87-114.
- 권혁주·곽효경(2006),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정책적 쟁점”, <한국정책학회보>, 15(4):189-210.
- 김경아(2008),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1(4):1503-1523.
- 김경아(2011), “중고령자가구의 가구소비 여력 결정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31(3):573-590.
- 김상호(2007), “연금자산과 가계저축: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55(3):119-142.
- 김수완·조유미(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가구유형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 및 빈곤제거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9:5-37.
- 김원식(199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후생비용 측정연구”, <재정논집> 7:199-218.
- 김태일(2007),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정부학연구> 13(1):191-231.
- 김태일·박규성(201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비교분석: 공적연금개혁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173-204.
- 금현섭·백승주(2014),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 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145-175.
- 문숙재·김순미·김연경(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223-235.
- 민인식·최필선(2016),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지필미디어
- 배미경(2006),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연구-포트폴리오 영향변수 및 재정

비율을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3(2):119-145.

서영빈·송헌재(2015),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8(3):119-147.

손병돈(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4):1445-1461.

임경묵·문형표(2003),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227-276.

이종성(2018),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 변화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나영(2003), “노령기 소득상실 대비책으로서 공적연금 효과성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현주(2019), “공적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수준, 소비수준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8(1):305-328.

차은영·김수현(2013),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여성경제연구> 10(2):165-188.

최령·황병덕(2016),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 대상자들의 은퇴 후 생활만족 영향 요인”,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0(3):199-211.

허만형(2017), “공적연금 불평등 연구-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6(4):377-395.

Barro, Robert J.(1978),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Private Saving: Evidence from the U.S. Time Series”, Washington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Cohen, J.(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Second Edition)*, NJ:Lawrence Earlbaum Associates.

Leimer, Dean R., and Lesnoy, Selig D.(1982), “Social Security and Private Saving: New Time-Series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3):606-629.

Feldstein, M.(1974), “Social Security, Induced Retirement, and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5):905-926.

Feldstein, M.(1996), “Social Security and Saving: New Time-Series Evidence”, *National Tax journal* 49(2): 151-64.

## Abstract

# Analysis of the financial status of the elderly

– Compared with whether it  
receives special pension and  
whether it receives public  
pension –

Song, Hye-kyo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In this study, I obtained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survey data from the second(2008) to the sixth(2016). I divided the group into the



special pension recipients(1,151) and the non-recipients(26,385), the public pension recipients(7,972) and the non-recipients(19,564). The difference in income, consumption, and assets between pensioners and non-pensioners was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t-test. And the effect of pension status on financial status wa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inequality was confirmed by the Gini coefficient in the financial status of pensioners and non-pension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ensioners differed in terms of financial status from non-pension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otal income, total consumption, total assets, real estate assets, and financial assets between the special pensioners and non-pensioners. Earned income was added between public pensioners and non-pensioners. Second, in the case of pensioners, the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status were gross income(+) and earned income(-). Third, the inequality of assets in pensioners and non-pensioners was confirmed.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savings are reduced when there is a pension, but in this study, pensioners are characterized by higher asset income and asset level than non-pensioner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asset side in policy approaches to the elderly 's retirement preparation.

**keywords : elderly people, financial status, special pension, public pension, inequality**

*Student Number* : 2017-27118